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출발

보도시점 2024. 4. 2.(화) 배포 즉시

현장 눈높이에 맞춰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4.2.(화) 조선일보, 정부도 설명 못하는 '중대재해법' 맹탕 '산업안전교육'만 늘어나네

2. 설명내용

□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이 법 적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**법 설명 매뉴얼과 업종별 가이드라인*** 등을 이미 **제작·배포**하고,

* ▲숙박 및 음식점업, ▲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, ▲벌목업, ▲인쇄업 등 20개 업종 대상 업종별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('22년) 제작

○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(83.7만개소)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'22~'23년 지난 2년간 **45만개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, 교육, 기술지도 등을 지원**하였음

□ 5인 이상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 올해에는 사업장이 **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**하고 **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연계** 받을 수 있도록 **'산업안전 대진단'을 실시**하고 있음

○ 정부는 **지난 2년간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약 38만개소**의 영세 중소기업이 대진단을 통해 우선적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**관계부처, 협단체 등과 함께 대진단 참여 안내, 설명회 등 홍보에 총력**을 다하고 있음

○ 그 결과 3월 말 기준 **25만 5천건의 안전수준 진단이 완료**되었고, **12만개 사업장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**하였음

□ 또한,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가이드라인을 **'현장 중심의 핵심 내용 위주로 간소화'**하고자 협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**가이드라인을 정비***하고 있고

* 대한숙박업중앙회, 한국외식업중앙회,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, 한국경비협회 등 의견수렴(3.29), 4월까지 17개 업종 협단체 등과 순차적 의견수렴 예정

○ 사업주 교육, 설명회 시에도 영세사업장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**쉽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명**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음

□ 앞으로도 정부는 법 적용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**영세 중소기업의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신속히 지원**하기 위해 **'산업안전 대진단'**을 중심으로 **현장 눈높이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지속**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박지혜 (044-202-89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영 (044-202-892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